등촌동 워크숍 02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노동운동의 길찾기

발제·토론 : 문설희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교육센터 '울' 교육국장)

최근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면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법'은 있을까요?
연금, 의료, 교육, 돌봄, 교통, 에너지 등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지금,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이 취해야 할 입장은 무엇일까요?

2023년 4월 4일(화) 오후7시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모아홀)
문의 : pssp4001@gmail.com
신청링크 : bit.ly/등촌동워크숍
주최 : 사회진보연대 공공운수노조 회원모임

2차 등촌동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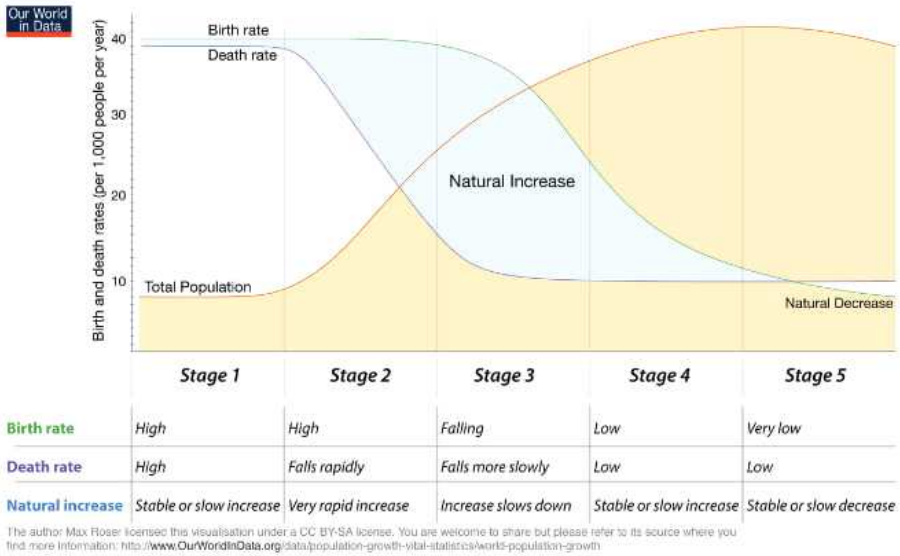
[발제문]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사회운동의 길찾기

2023.4.4. 문설희(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페미니즘팀)

1. 현상

(1) 세계적인 저출산

- 산업혁명 이후 고출산·고사망에서 저출산·저사망으로 전환
- 인구성장률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
- 저출산은 세계적 현상 [日 1.3명 中 1.16명 '유엔 세계인구 전망 2022(2021년 집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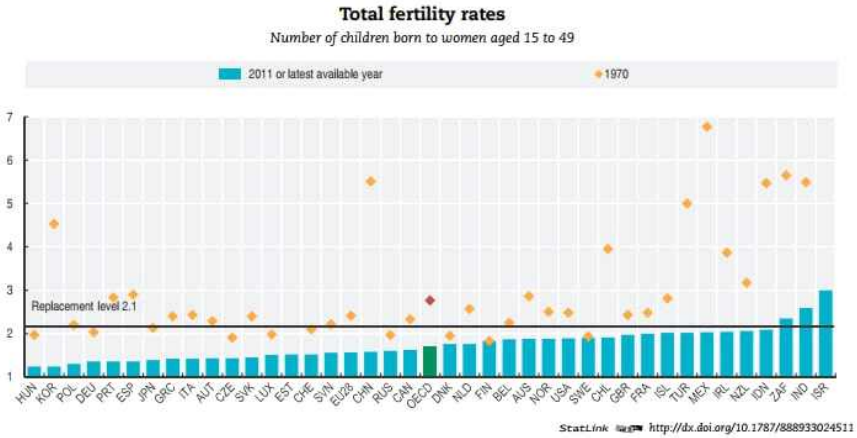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Stage 5
Birth rate	High	High	Falling	Low	Very low
Death rate	High	Falls rapidly	Falls more slowly	Low	Low
Natural increase	Stable or slow increase	Very rapid increase	Increase slows down	Stable or slow increase	Stable or slow decrease

The author Max Roser licensed this visualisation under a CC BY-SA license. You are welcome to share but please refer to its source where you find more information: http://www.OurWorldInData.org/data/population-growth-vital-statistics/world-population-growth

[용어 정리]

▷저출산 :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보다 낮은 현상.
▷초저출산 :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되는 현상.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조(粗거칠조)출생률 :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사람의 비율. 1년 동안의 총 출생아 수를 해당 년도의 총 인구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한 값.
▷인구대체수준 : 자녀세대의 인구 크기가 부모세대와 같은 수준. 2.0이 아니라 2.1인 이유는 태어난 모든 이가 생존해 다시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

①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s)
: 1970년대 가임 연령대 여성 1명당 자녀 2.7명에서 2000년대 초반 1.7명까지 떨어지며 극적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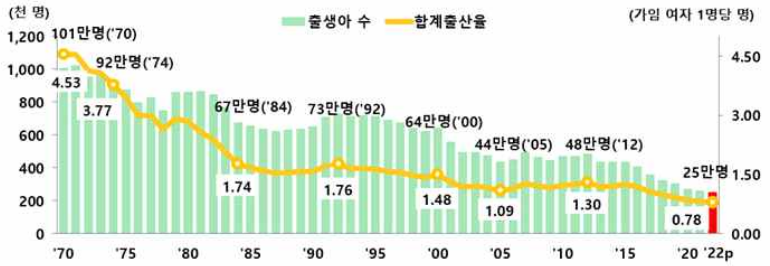
② 유럽의 저출산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음.
"인구론적으로 표현하면, 유럽은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20여 년 후면 우리의 나라는 텅 비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술력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1984년 자크 시라크 파리 시장

유럽의 저출산 경향에 대한 자극적인 언어들 : 백색 전염병("핵무장보다 더없이 위험한, 임신·출산에 대항하는 새로운 무기인 피임과 낙태"), 전염병 인구론, 인구 붕괴, 인구론적 자살...

③ 그래도 세계인구는 증가 중. 다만 느린 속도로.
: 세계 인구는 2022년 현재 연간 약 0.84% 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인구는 21세기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지만 훨씬 느린 속도로 증가할 것.
※"세계 인구 시계" https://www.worldometers.info/world-population/

(2) 한국의 초저출산
- 한국의 합계출산율 : 1970년 4.53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에는 대체수준(2.10) 아래인 2.06으로 떨어졌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 2010년 1.23, 2022년 0.7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한국의 출생아 수 : 1958년~1974년까지 100만~95만여명 출생. 82년생 85만 명, 91년생 71만 명, 00년생 64만명, 02년~16년까지 40만 명대 유지. 2020년 27만 2000명으로 30만 명대 무너짐. 한 세대 만에 출산아 수가 61% 감소한 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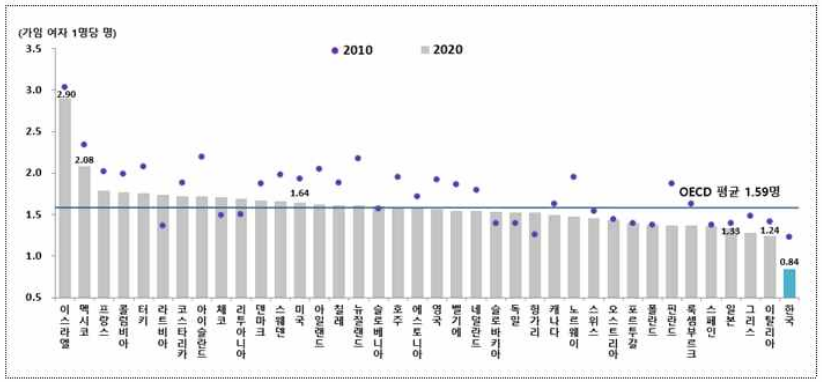
[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2p



① 한국의 초저출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0.78명 쇼크...한국이 사라져간다"
: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전년대비 1만 1천 5백 명(-4.4%) 감소. 한 세대 전(91년 1.71명, 71만명)과 비교 시 출산율 1/2, 출생아 수 1/3 하락.
※통계청, 2022년 인구동향조사(23.2.22)

②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이래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게다가 초저출산 기간이 길어지고, 속도가 매우 빠르다. ("급격한 다운사이징")

[그림 9]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2010,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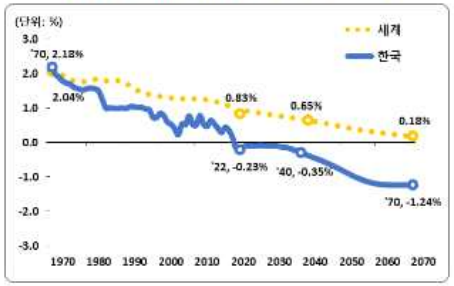


③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 2022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0.83%, -0.23% 수준으로 전망. 2040년에는 세계 0.65%, 한국 -0.35%, 2070년에는 세계 0.18%, 한국 -1.24% 수준이 될 전망
: 2022~2070년 기간 중 세계와 한국의 유소년인구 구성비는 각각 6.7%p, 4.0%p 감소, 생산연령인구도 각각 3.6%p, 24.9%p 감소할 것으로 전망. 반면 고령인구 구성비는 각각 10.3%p, 28.9%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1970년 54.4%에서 2012년(73.4%)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22년 71.0%, 2040년 56.8%, 2070년에는 46.1%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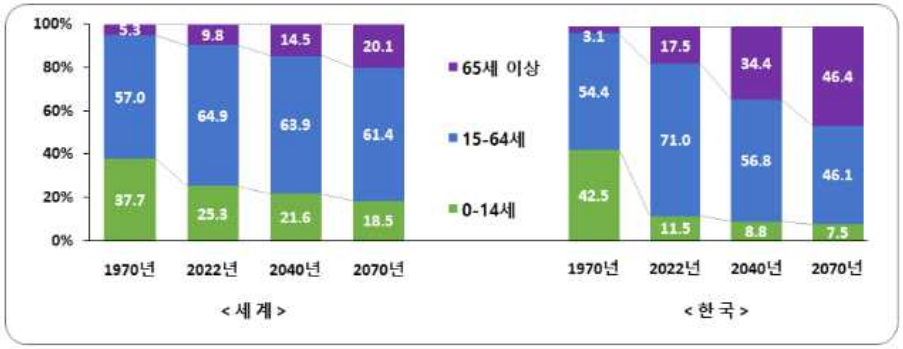
: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5%로 1970년(3.1%) 대비 6배 수준으로 증가, 2070년에는 46.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2022.0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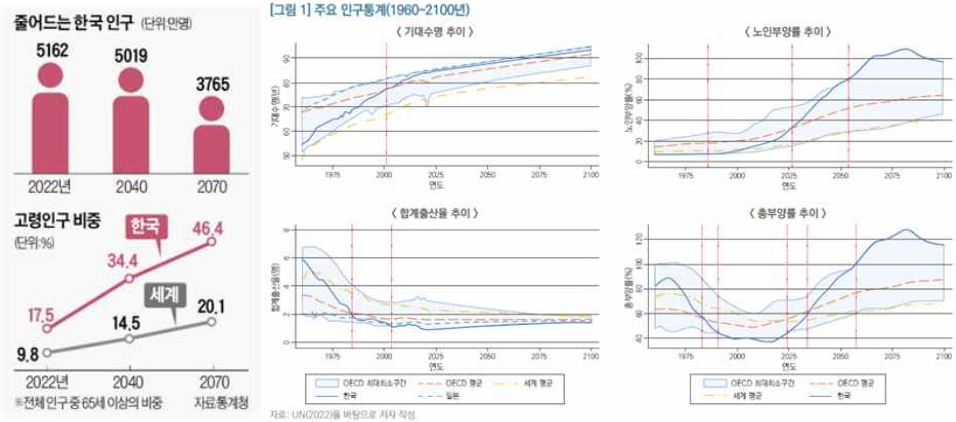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곧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의미하며 사회의 저성장, 경제위기 심화로 이어짐. 사회 문제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인구감소·저성장'이라는 분석틀로 인식하는 것이 적합.

[저성장·인구감소라는 시대인식]

한국의 고도성장은 주로 자본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한 손쉬운 접근법(외국 기술 도입, 농촌 인구 유입)이 한계에 도달하고, 높은 투자율은 자본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졌다. 자본축적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축적속도도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론적 전환으로 인해 노동투입도 감소세로 전환한다.

한국경제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모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청년들이 대학입시, 스펙, 취업을 둘러싼 경쟁에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높은 체감 실업률과 기성세대와의 격차 때문이다. 얼마되지 않은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진입 경쟁에 성역할 갈등이 중첩된다. 안정된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청년 세대는 가족 형성(결혼 또는 출산)을 유보하거나 포기한다. 한국 사회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성의 권리 수준과 실제 여성들이 겪는 현실의 괴리가 크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상징적·제도적 수준에서 성평등이 달성된 듯 보이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와 여성 노동의 저임금 부문 집중,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여성 책임은 강고하게 남아있다. 특히 한국은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과 낮은 고용률로 인해 성별 격차도 크다. 그런데 청년 남성들은 재생산의 위기를 '남성성의 위기'로 체감한다. 남성이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전통적 성역할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조적 태도에 더해 여성의 이중부담이라는 현실은 눈감은 채 재생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기도 한다.

이처럼 저성장·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위기가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또다른 사회적 모순을 심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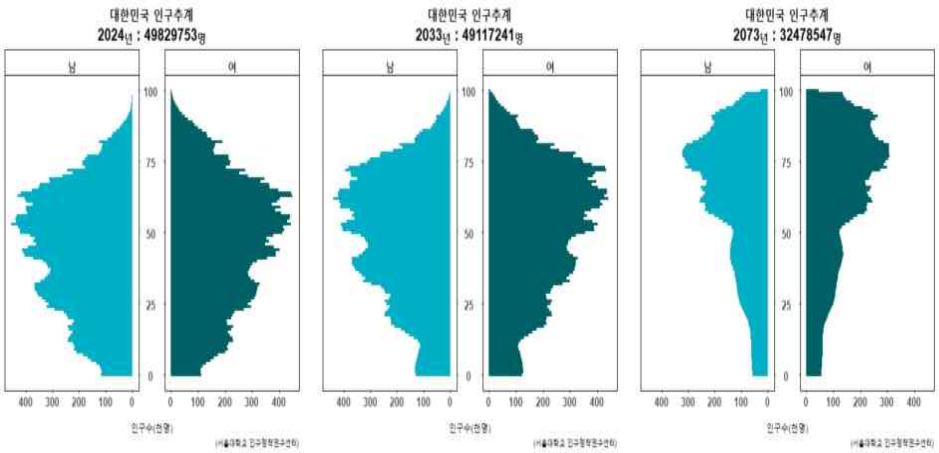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2022.9.6. 이태석, KDI 연구위원)

"총부양률이 2034년부터 OECD 평균을 넘어서고, 2058년부터는 100%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건강상태의 충분한 개선과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확보를 전제로 한 노인 개념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2. 영향

-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학령인구 감소, 소아과 전공의 부족, 지방대학 정원미달, 지방소멸, 노인부양비, 의료비증가, 연금고갈 등
- 세수감소 vs 사회보장 지출 비중 확대 ->미래세대 부담증가("세대간 통합 손상")
- 인구감소->저성장->경제위기 심화->세대·성별 갈등, 여성의 이중부담 심화



3. 입장들

(1) 출산율을 높여라?

- 인구감소 문제를 가치관 변화(개인주의, 결혼/임신/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는 입장. 여성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정책을 제시.
- 인구감소 현상의 원인을 여성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인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분석이 아닐뿐더러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장이 아님.

※ 2010년 이명박 정부, 저출산종합대책으로 낙태 단속 시도 -> 70년대 출산억제정책 낙태권장, 2000년대 출장장려정책 낙태단속? -> "낙태 단속이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이야기할 때다!"

(2) 저출산 해법은 성평등?

- 인구감소 문제를 '저출산담론'으로 비판하는 입장. '저출산' 현상의 근본원인을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있다고 보면서, 국가의 성평등 정책 및 남성의 돌봄책임 촉구.
-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는 '성차별'에서 기인한다기보다 자본주의와 가족구조가 내재한 한계의 필연적 귀결이며, 아동노동의 중요성이 역사적으로 변화했기 때문. 성평등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인구감소 역전은 불가능. 물론 성평등 정책, 즉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의 강화는 인구감소 속도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저출산 해법은 성평등"이라는 입장은 인구감소의 원인을 잘못 짚는다는 점에서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한편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 인구감소 책임이 여성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학문적으로 엄연히 다른 개념을 의도적으로 혼용하여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문제를 야기함. 또한 '출생'은 성평등이고 '출산'은 성차별이라는 식의 대립적 사고는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여성

이 처한 복합적 현실(고령산모 증가, 난임의 문제 등)에 부합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 없음. 낳을 권리의 보장은 낳지 않을 권리를 전제로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산강요(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제약)'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임신·출산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

[저출산VS저출생]

최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자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출산'이란 용어가 여성의 아이 낳는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쳐왔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이며, 많은 여성이 '저출산'이란 용어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가족계획 일변도였기에 발생한 반작용이라 할 수도 있는데, 가족계획 정책이 무척 다양한데도 우리나라는 줄곧 '출산'에만 초점을 맞춰 반발을 샀다. 이에 2018년 여성가족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그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의 공식문서에서도 '저출생'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구학의 학문적 의미에서 보면 '출생'(birth)은 말 그대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출산'(fertility)은 아이가 생겨나고 엄마의 배 속에서 자라나 세상에 태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다. 즉 여성의 산전 및 산후 건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출산'으로, 학술적 의미로는 출생보다 오히려 출산이 더욱 여성의 권익을 고려한다 할 수 있다. - <인구 미래 공존> (조영태) 中 "'출생'(birth)과 '출산'(fertility)은 엄연히 다른 개념"

<한겨레>는 출산과 출생의 의미가 학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출생' 용어가 성평등이라는 지향점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통계 수치나 공식 발표, 연구 등 엄밀한 개념어가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곤 가급적 '저출산' 대신 '저출생'으로 표기해왔습니다. 인구 정책의 목적이 아이를 낳도록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구조에 맞춰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의 경우 공식 정책 명칭인 '저출산'을 사용하되, '저출생'을 병행 표기합니다. - <한겨레 신문> "저출생? 저출산? 어떻게 다른가요" 中

- 나아가 저출산 현상을 '출산파업'으로 여기는 인식에 대해서는 "임신·출산은 파업의 수단인가, 여성의 권리인가?",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여성이 처한 복합적 현실에 부합하는 분석과 진단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음. 또한 만혼(晩婚),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난임 환자 비율 급증 등과 같은 현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고찰이 필요.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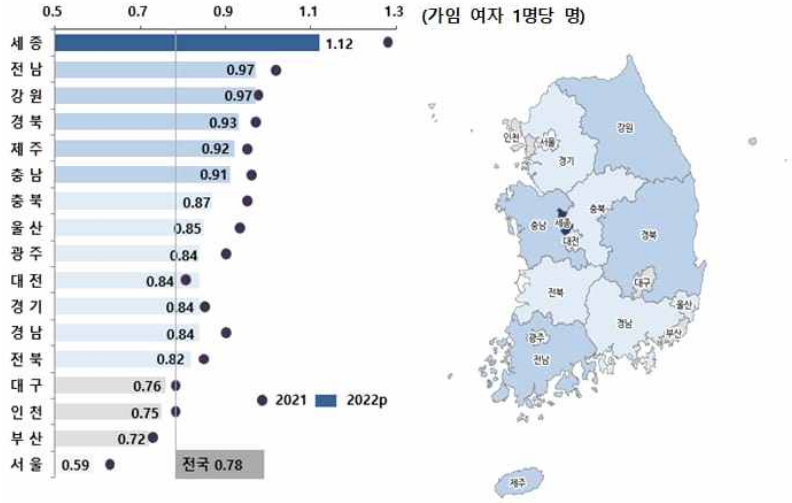
※ 2017년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여성들 출산파업 진짜 문제는 저출산 아닌 국민 삶의 질" 공감대 형성.

"최첨단 의료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2020년 합계 출산율 0.84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2년 연속 세계 꼴찌를 한 셈이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 세계인구포럼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2750년에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세계 3대 난임센터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난임병원 아기천사병원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아기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 <헬로 베이비> (김의경) 中

(3) 적응과 공존

- '저출산' 심화의 원인으로 가족 형성을 어렵게 하는 복합적 사회경제 요인(일 육아 병행 어려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초경쟁적 사회 환경, 고용 불안 등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짚고,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불균등하게 발생하면서 사회불평등과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는 문제로 접근.
-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TF' 자문위원장 역임)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을 서울, 수도권으로의 집중으로 분석하면서, 특히 서비스 부문의 청년·여성 일자리가 수도권에 편중된 현실을 지적. 지역균형발전 등 저출산 해결 프레임에서 벗어난 종합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년연장, 이민정책 등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공존의 전략을 세우자고 주장.

[그림 10] 시도별 합계출산율, 2022p



2022년 합계출산율 : 세종(1.12명).전남(0.97명).강원(0.97명) 순으로 높고, 서울(0.59명).부산(0.72명) 순으로 낮음.

- 출산율 제고가 아닌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인 입장일 수 있으나, 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어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인간 본성에서 찾을 뿐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에 국한되지 않는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대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신멜서스주의의 한계).

※ 2023년 3월 28일 윤석열 정부「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개최,「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발표.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 후첨 참고자료 참조.

[저출산 대책은 언제부터?]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정책 실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평가. "정책의 목표가 추상적이었다. 4차 기본계획(2021-2025)의 경우 '개인의 삶의 질 제고'가 목표였는데,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서는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말 필요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선택하여 집중하고자 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것을 정책의 큰 목표로 세웠다."

참고로 최근 국민의힘이 언급하여 논란이 된 저출산 정책들에 대해 저고위 관계자들은「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발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힘. "만18세까지 월100만원을 준다고 아이를 낳아 키울 것인가?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가 낮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아동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정책이다. 수당이 부모에게 지급될 경우 그것이 아이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만 볼 수 없다. 재정이슈도 있다.", "현금성 정책보다는 보편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마르크스주의와 인구론

(1) 마르크스의 인구론

- 빈곤의 원인 = 인구과잉 X 노동자예비군의 증가!

: 멜서스 절대적 과잉인구(인구압력) 개념을 비판하면서 상대적 과잉인구, 즉 '노동자예비군'(실업) 개념을 제시. '빈곤'의 문제는 산업예비군의 증가를 뜻하는 것이지, 출산율·인구성장률과 무관. 자본축적과 기술진보의 편향성이 원인.

[멜서스 인구론 비판]

맬서스(Thomas R. Malthus 1766~1834)는 '인구과잉'을 빈곤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지나친 인구증가가 식량가격 상승을 일으켰고 이는 실질임금 하락 및 생활수준 하락으로 이어져 질병에 따른 사망률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산업혁명 시기 영국 도시의 끔찍한 삶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산층의 금욕적 삶을 하층민들도 따라야한다고 주장한다. 멜서스주의는 노동자들을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대상으로 경멸하는 입장을 강화하였는데, 경제적 능력도 없이 일찍 결혼하여 다산하는 노동자들은 빈곤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악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구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멜서스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는 부족하다(시큼의 분석은 '식량생산의 증가가 인구증가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통상적 해석을 실증적으로 기각한다). 왜 유독 17세기 유럽의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8세기 말에 이르러서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는지를 '남녀간의 성욕은 필연적이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멜서스의 주장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그렇다면 그 이전 시대의 남녀는 성욕이 필연적이지 않았던 것인가?). 또한 영국의 경우 19세기 전후로 국민총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인구증가율을 앞지른 것은 멜서스 인구론과 거리가 먼 현상이었다. 무엇보다 맬서스 인구론의 대상은 고출산·고사망이므로 저출산·저사망으로의 전환을 설명하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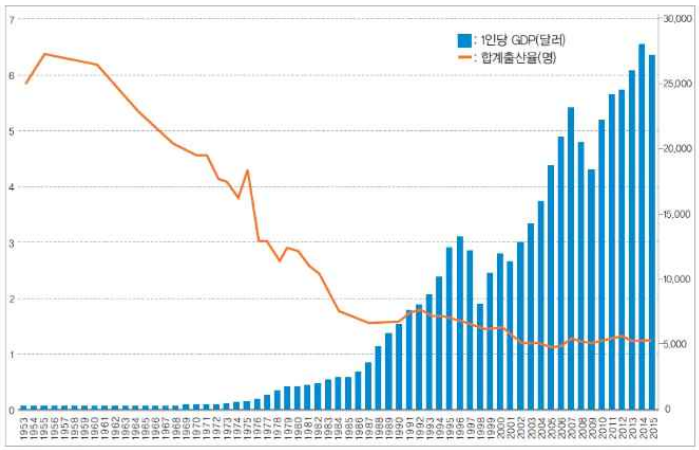
했다. 개인의 욕구를 제한하는 발상은 실효성 있는 사회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임'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전 세계적인 가족계획 사업의 근간이 된 신(新)맬서스주의도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의 인구변천 문제를 적합하게 분석하지 못한다.

(2) 자본주의 인구법칙

- 임금률과 출산율·인구성장률은 반비례 관계

: 1인당국민소득·임금률·생활수준이 상승하면 출산율·인구성장률은 하락한다.

〈그림〉 우리나라 1인당 GDP와 합계출산율 추이(1953~2015년)



자료: 통계청

(3) 역사적 가족형태

- 생산관계에 적합한 제도로서 '가족'이 역사적으로 변화. 아동노동의 중요성 역시 변화.

: 캐나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시쿰은 마르크스주의자와 페미니스트가 인구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파하며, 이행에 있어 인구론적 차원의 문제들이 미치는 영향을 논증하고자 생산양식 개념과 가족형태 개념을 결합하는 관점에서 인구 문제 분석을 시도한다. 서유럽의 지배적인 생산양식이 전복되고 대체되는 시기에 발생한 노동계급 가족의 출산 패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마르크스 인구론의 유력한 해석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Seccombe, Wally(1983), "Marxism and Demography", New Left Review, Jan).

① 특정한 생산양식 하에서 노동계급의 출산 동역학은 생식력이라는 하나의 도식으로 해석될 수 없음. 특수한 상호보완적 또는 모순적인 조합을 확인해야 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출산 방정식	출산·양육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조건을 획득	출산·양육의 장단기 비용과 잠재적 이익 사이의 균형	성관계와 출산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적 조건	출산 통제 수단과 관련 지식

"모든 특수한 역사적 생산양식은 자신만의 특수한 인구 법칙을 가진다‥" Marx, 『자본』1권.

"인구는 예를 들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계급들을 무시한다면 하나의 관념이다‥[관념 속에서 인구는] 전체에 관한 혼란스러운 개념이다." Marx,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② 18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서유럽의 인구론적 전이, 특히 지배적인 생산양식이 전복되고 대체되는 이 시기에 발생한 노동계급 가족에서의 출산 패턴의 변형을 살펴봄.

농노가구

'토지 맞춤 만혼 시스템'. 결혼은 특징적으로 늦었고(평균 초혼연령 대략 26살) 보편적이지 않았다. 경작지의 가용성(토지점유권 상속 여부)에 따라 결혼이 지연되거나 억제되었다. 가구당 아이의 수 역시 너무 많지는 않았다.

가내수공업의 원산업적 가구

'인구론적 온실'. 17-18세기 산업자본주의로의 오랜 이행 과정에서 서유럽의 시골에서 우후죽순처럼 퍼진 독립적 상품 생산에 기반. 가내 공업이 성장하면서, 토지의 긴요성이 약화되고 자녀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 역시 약화. 초혼 연령이 낮아지고 비용/인센티브 구조가 크게 변화되어 출산이 선호됨. 아이가 물레를 돌릴 수 있으면 스스로 밥벌이는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넘쳐나는 자녀들은 활황기에는 구원이 되다가도 불황기에는 장애가 되었다. 이는 원산업 계급이 궁극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적, 인구적인 이중적 구속이 되었다. 19세기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가내수공업을 밀어내면서, 이 계급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인접한 계급-프롤레타리아트-의 구성원으로 쏟아져 나가도록 했다.

초기 프롤레타리아 가족 가구

'단기 가족 노동 수요 체제'. 프롤레타리아화(생산수단과 분리된 임금 노동자 대중의 형성)는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가부장제적 권위의 분명한 상실도 동반했다. 프롤레타리아는 다음 세대에 전달할 재산이 없었고, 따라서 토지 상속 패턴의 효과는 완전히 사라짐. 이는 청년들에게 구애를 통해 짝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며 부모의 승인과 상관없이 법적 승인을 통해 자신들의 결혼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결혼과 독립의 제도적 장벽은 극적으로 낮아졌다. 출산의 인센티브는 컸다. 10살에서 18살의 청소년 2~3명의 소득은 가구 전체 소득의 40~60%를 차지했다. 그러나 불황기 노동시장에 직면하여, 아이들의 구체적인 고용 전망이 출산 인센티브 구조를 변동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 새로운 산업 도시들이 상하수도 문제로 생태적 재앙구역이 되었을 때, 초기 프롤레타리아 가구에서 영아사망률이 다른 노동하는 계급들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강력한 보상 자극이 나타남. 출산 간격이 짧아지고 평균 수유시간을 줄였으며 유모에게 양육을 맡김. 높은 출산율과 높은 영아사망률의 결합은 여성노동력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했고,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으며 건강을 악화시켰다.

원숙한 프롤레타리아 가구

'결혼 관계 내에서의 출산조절 체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출산 체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 1850년~1870년 사이 평균 코호트 출산율이 5에 가까웠던 반면, 20세기 초에 태어나는 코호트에서는 거의 2로 떨어진다. 이러한 극적인 감소는 30대 초의 광범위한 출산 중단에 의한 결혼 출산율의 감소에 기인한다. 아동노동의 금지는 도시 프롤레타리아 가구의 가족임금 경제를 끝냈고 그로 인해 출산 방정식이 근본적으로 변화.

아동의 수입 창출 능력 전망도 낮아짐. 보통 교육의 출현으로 일인당 양육비는 크게 높아졌다. 노동계급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물려주려고 했다. 완경기 훨씬 이전에 출산을 중단하는 것은 노동계급 여성에게 일반적인 규범이 되었고, 결혼 생활에서 규칙적으로 피임약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노동계급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패턴이 양에서 질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 노동력 교체주기의 변화는 자본축적의 방식이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에서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으로 변화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 성인 남성 노동자의 생산성 강화가 관건이 되었고, 단일(남성 생계부양자) 노동력 모델은 2~3명의 아이를 출산한 후 임신을 중단하여 가족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선호하는 변화로 이어짐.

5.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두 개의 나침반으로 사회운동의 길을 모색하자.

(1) 자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적 구조에 대한 상상

- 인구감소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외연적 성장의 한계를 뜻한다(이는 현실사회주의도 경험한 한계). 자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적 구조를 상상하는 힘이 필요.

(2) 성별화된 시민권으로 새롭게 쓰이는 '모성'

- 여성들이 출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가족/교회/국가의 간섭 없이 임신의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양육의 방식을 공동체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 모성의 권리가 성별화된 시민권으로 새롭게 쓰여야 한다.
- 여성이 '아이를 가지려는 소망'과 '나만의 인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거나 혹은 기약 없이 권리의 행사를 보류하는 상황은 현대 시민권에 '권리로서의 모성'의 자리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 청년[19~34세] 여성 44.7% '출산의향 없다' (*남성 29.5%)
: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 35.7%로 꾸준히 증가추세. 난임 비율도 늘어.

(3) 청년·여성들, 미래세대가 처한 현실에 부합하는 사회운동으로 거듭나자

-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두 개의 나침반으로 사회운동의 길을 모색하자. 청년·여성들과 미래세대가 처한 현실에 적합한 사회운동으로 거듭나자.
- 여성의 이중부담 문제에 주목하고 여성 스스로 사회적 노동참여의 권리(노동권)과 더불어 성·재생산 권리(여성권)를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운동·여성운동.
- 정년연장, 임금체계개편, 연금개혁 등 지체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자.

[돌봄서비스 제도 확대와 여성의 노동권·여성권]
3.28 저출산 대책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를 2027년까지 현행 수준의 3배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시간제 불안정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 아이돌보미 수당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얹어주는 식이 아니라 기본인력에 대한 월급제 도입 등과 같은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함. 노동조합의 유능한 정책적 개입이 시의적절하게 요구됨.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가정 내 돌봄서비스) 확대와 유보통합 시행·늘봄학교 확대 등(보육·교육

기관 돌봄서비스) 정책변화에 분절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면서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보편적 요구를 개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돌봄부문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되어 정책의 당사자이자 현장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없앤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등은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경제위기) 문제해결에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여성 노동의 가치절하, 여성노동자 내부 격차 심화라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 역시 여성의 목소리로 폭로해야.

[참고자료]
○ 3/28 대통령 주재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정책 추진방향·과제 발표.
>>보도자료 및 위원회 안건
http://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91

○ 저고위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하였다고 발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4차 기본계획(21-25년)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하겠다.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 도입,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평가·환류 체계 구축.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1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❶ (가정 내 양육)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서비스 27년 3배 확대
❷ (기관 돌봄, 초등 돌봄) 유보통합 시행, 늘봄학교 전국 확대
❸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 명시→아동 돌봄 국가책임 강화

2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❶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실태조사,신고센터,근로감독 등 이행력 강화
❷ 육아기 단축근로 및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근로시간 단축제도(주15-35시간) 만12살까지 부모 각각 최대3년 확대(현행 8살 2년). 하루2시간(주10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급.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

3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❶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❷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 주거공급 확대

4 **양육비용 부담 경감**
❶ 부모급여 지급 *만0세 월70(23.1~)→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❷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지급기준 개선 ❸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❶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❷ 난임지원 확대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 난임휴가 확대(연3일[1일 유급]→6일[2일])
❸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소아진료 인력 확충 등 소아 소아의료체계 강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 최종안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며,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 그러나 대책 발표 후, 새 정부 저출산 대책이 재탕,삼탕,맹탕이라는 비판 잇따름.

○ 이전 정부와 달리 성평등 기조가 안보인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 비판도. "윤석열 정부의 첫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에는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요소'의 기본 바탕이 되는 '성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비전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있다며, 성평등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 저출산 대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겨레)" 그러나 발제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저출산 원인이 성차별에 있다고 분석하기는 어려움. 인구감소 문제는 자본주의와 가족구조가 내재한 한계의 필연적 귀결이며, 아동노동 중요성의 역사적 변화 때문. 성평등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인구감소 역전은 불가능. 물론 성평등 정책, 즉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의 강화는 인구감소 속도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저출산 해법은 성평등"이라는 주장은 인구감소의 원인을 잘못 짚는다는 점에서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성평등 정책은 마땅히 강화될 필요가 있으나, 저출산 정책과 정책의 목표와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될 필요가 있음. 또한 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인구감소 시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겠다는 기조가 분명. 일 가정 양립 정책이 곧 여성노동권 보장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진이 될 것인지 여성 인력 활용에 그칠 것인지? 돌봄의 사회화가 될 것인지 돌봄에 대한 여성의 1차적 책임 강화가 될 것인지?)는 점에서 여성운동 및 노동자운동의 유능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임. 한겨레는 '성평등' 문구가 명시되지도 않고 '저출생'이 아닌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 정책을 비판. "출산과 출생의 의미가 학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출생' 용어가 성평등이라는 지향점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통계 수치나 공식 발표, 연구 등 엄밀한 개념어가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곤 가급적 '저출산' 대신 '저출생'으로 표기해왔습니다. 인구 정책의 목적이 아이를 낳도록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구조에 맞춰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의 경우 공식 정책 명칭인 '저출산'을 사용하되, '저출생'을 병행 표기합니다. 다만, '합계출산율' '출생률'처럼 인구학 통계자료를 언급할 때는 학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개념의 용어사용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합리적

인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출생'은 성평등이고 '출산'은 성차별이라고 대립시키는 것은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여성이 처한 복합적 현실(고령산모 증가, 난임의 문제 등)에 부합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 없음. 낳을 권리의 보장은 낳지 않을 권리를 전제로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산강요(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제약)'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임신·출산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정세에 부합하는 여성운동 및 노동자운동의 역할.

>>관련기사 [한겨레] 경력단절·독박육아 '공포' 현실인데…'성평등' 아예 사라졌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5587.html
>>관련기사 [한겨레] 저출생? 저출산? 어떻게 다른가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5590.html

○ 고령사회 대응 관련해서는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의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 ❶ 의료-돌봄 연계 혁신 ❷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❸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❹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❺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정년연장, 임금체계개편, 연금개혁 등 인구감소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모색이 지체된다면, 정부 정책에 유능하게 개입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

[3] 고용 · 일자리 지원 강화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 중장년 친화 일자리 사업 확대**

○ **(계속고용제도 논의 착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
- 경사노위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착수**('23.2분기~)
- 논의 결과에 기반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추진**('23년 말)

○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제공,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등 노사 협의를 통한 **자율적 계속 고용 제도 확산** 지원

○ **(노인일자리 고도화)** 노년기 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속 확대**, 신노년층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확충**
-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를 고려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 등 추진

○ 한편 저고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이전에 여성가족부는 2/16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함. "맞벌이 가구 증가와 긴 근로시간 등으로 아동 양육부담이 매우 큰 상황"을 정책강화 배경으로 짚으면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기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핵심 목표로 제시.

>>여가부 브리핑 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7&bbtSn=709152

[토론문] 인구 위기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쟁점

박준형(공공운수노조 교육국장)

※ 노조 직책과 무관한 개인적인 견해의 토론문입니다.

1) 인구변천의 원인과 공공부문

- 인구문제 접근에서 (1)인구감소를 감속하기 위한 대안, (2)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대안을 모두 고민할 필요. 노동운동도 중요한 사회적 주체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 인구학적, 경제학적으로 일반적으로 도시화의 진전과 경제성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교육수준의 상승 등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함.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에서는 농경사회와 달리 아동이 더 이상 생산적 노동력이 아니라 '비용'이 되며, 소수의 자녀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기 때문.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도 작동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성장과 성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출산율 하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임
- 유럽 사례를 보면 복지체제에 따라 출산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 중심의 복지체제, 정규직(남성 가장) 보호가 강한 남유럽의 출산율 하락이 더 빠른데, 그러한 복지체제에서 청년 실업률이 높고 결과적으로 핵가족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경력단절 문제도 큼. 반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지출이 높은 북유럽 모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면서도 출산율은 다소 높음. 그러나 한국의 복지체제는 남유럽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저출산 대책은 (단기적인) 출산지원 관련 예산의 증액 여부나 일부 유인책만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적인)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구조를 포함한 사회구조, 제도들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

  *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남유럽에 집중.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1.24명)를 비롯해 그리스(1.28명), 스페인(1.36명) 등이다. 스웨덴(1.66명), 덴마크(1.67명) 등 북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1.64명)의 출산율은 선진국 중 상위권. 독일(1.53명), 영국(1.56명) 등은 OECD 평균(1.59명)에 약간 못 미침(조귀동, '한겨레21' 1446호, 한국의 미래는 이탈리아? - 지난 20여 년 중하위층 소득 악화, 포퓰리즘 득세… 격차 심화한 한국도 같은 길 가나)

- 현재의 사회경제 체제, 사회복지 제도는 20세기 후반(2차 대전 전후) 경제성장과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설계된 것임. 그러나 현재 상황은 장기 저성장(혹은 역성장)과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음(마르크스주의적 분석만이 아니라 주류경제학도 유사한 결론). 따라서 20세기 특히 전후 성장기 상황에서 설계된 사회, 경제 제도는 앞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가운데 논의의 필요

- 결국 인구문제는 경제구조와 사회정책(복지체제)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정책 영역은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이 관심을 갖고 관여해야하는 쟁점이기도 함

2) 인구변천의 경제적 영향과 공공부문

-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은 경제성장율의 감속임. 경제성장은 노동력과 자본 투입 증가, 총요소생산성(제도와 생산기술 등)에 의존하는데, 직접적으로 노동력 투입이 감소함. 이와 함께 조세나 사회보험료, 가족 지출을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하는 총부양비도 증가하는데, 이는 가계 저축의 감소로 이어지며 자본 투자를 감소시킴(비생산인구의 부양에서 노인과 아동도 차이가 있음. 후자는 미래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적자본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전자는 [필수적이지만] 순전히 소비적 성격).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저하. 현재 대부분의 예측은 성장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지만 실제로는 성장률 하락 혹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할 가능성 높음

  * 총부양비: 생산하는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인구 숫자, 노인과 아동, 장애인을 포함

- 인구가 줄어들면 일자리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임. 경제성장률 감속과 투자의 축소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 대기업들은 줄어든 노동력에 대응하기 위해 오히려 자동화를 더욱 촉진하게 되고 자동화가 어려운 부문은 외주화하므로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해소되지 못하거나 국민경제의 축소 속에서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생산가능 인구감소와 함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어디/누구에 부과하든) 총세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각종 공공서비스,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 문제가 발생함. 최근 한국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 프랑스 연금개혁 문제가 부각되는 것과 같은 사례.
- 이러한 세수감소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1)증세, (2)정부 부채 증가의 두가지
- 먼저, (1)증세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해 부자증세 혹은 자본수익에 대한 증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한 증세는 상당히 필요한 것은 분명하며 최근 감세 정책은 상당한 문제가 있음. 그러나 증세도 역시 한계도 있다(만능은 아니다)는 점은 감안해야함. 부유세 혹은 법인세 인상 시 (개방경제에서는) 자본도피와 투자 축소가 발생하는데, 이는 환율(원화 가치 하락으로 구매력 저하와 인플레이션 조장)과 성장률 하락으로 다시 영향을 주게됨, 그렇다고 폐쇄 경제로 전환하면 더 큰 성장률 하락을 맞게 될 것임. 결국 대안도 현재의 경제구조 하에서 작동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세계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변혁 노력도 추구해야하지만, 당장 실현은 어려우므로 지속

적으로 병행해야할 문제, 비록 그러한 변화가 차츰 이루어진다고 해도 인구감소는 그것대로 계속되기 때문에 현실의 대안이 필요함)

- (2)정부부채 증가로 대응하자는 입장은 최근의 MMT 등 포스트 케인지언의 주장, 최근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호응이 많음. 그러나 정부나 공기업 부채도 원금은 상환을 연기하더라도 적어도 이자는 계속 갚아야함. 저금리 상황에서는 문제가 적지만 최근처럼 고금리로 전환될 경우 다른 공공지출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발생(일본의 경우 높은 국가부채 비율로 인해 매년 예산의 25% 이상이 국채 이자 비용으로 지출, 한전은 회사채 연간 이자만 1조4000억원으로 송전망 투자에 영향). 비기축통화국이 부채를 자국 통화 발행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환율 하락과 인플레이션 악화, 회사채 발행 실패 등 민간부문의 자금동원을 구축하는(밀어내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국가부채 증가는 단기적 경기 변동 대응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인구위기 대응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 어려움

-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소멸도 진행되는데, 이 경우 기존에 광범위하게 건설한 인프라도 남아돌게될 가능성이 많음. 특히 비수도권 지방의 경우가 지방소멸과 연계하여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지방 국도 같은 경우). 이미 건설된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도 부담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임. 따라서 이후 인프라 건설 투자는 추세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음. 결과적으로 경기침체기에 경기부양 수단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벌여온 역대 정부의 정책이 점점 작동하기 어려워질 것(SOC 공기업 부문의 확장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조세만이 아니라 사회보험도 문제가 됨. 건강보험은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게 됨, 이에 따라 2030년대에는 재정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조만간 '직장가입자 월급의 8% 안에서'로 정한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폐지도 불가피할 것임. 다만 이 과정에서 수가제도의 개혁, 공공의료 확충 등을 지출 구조조정을 같이 진행해서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2060년 전에 현재 적립한 기금이 고갈되면 사실상 부과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후세대의 부담 가중(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임. 한국에서 이들 사회복지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건보 국고지원처럼) 일부 제도를 보완한다고해도 완전히 조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어렵고 조세 방식으로 전환해도 해법이 명확하지 않음.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보험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면밀한 정책과 전략, 다음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으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공동의 투쟁으로 계급적 정의를 실현해가기 위한 '세대 간 정의, 세대 간 연대' 전략 필요

3) 대안 모색 :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

- 아이를 낳아 키울만해야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됨. Esping-Andersen은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출산율의 유지를 통해 사회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지적. 동시에 세대간 정의에 입각하여 근로인구와 노령인구의 분배를 조정하는 연금제도의 개혁,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고용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투자, 일자리 질 유지, 경제적 성장 지속하는 것이 강조(석재은, 2014).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은 양호한 출산율을 통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회복지 제도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유럽 사례와 함께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는 노동시장 제도와도 연관됨. 북유럽과 달리 남유럽 복지 모델이 출산율 개선에서나 경제적 성과로도 이어지지 못했는지를 평가한다면, 한국의 사회복지, 노동시장 제도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음. 노동운동의 대안, 정부에 대한 요구에도 반영되어야할 문제임. (물론 북유럽 모델은 남유럽과 비교 차원에서 참고할 대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거나 전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이라는 의미는 아님. 역사적 맥락의 차이, 강소국으로서 북유럽의 국가적 특성, 최근 북미/동아시아에 비해 저조한 경제적 성과 등을 볼 때 비판적으로 볼 부분도 있음)

- 향후 예상되는 재정 위기, 경제 성장률 하락 상황에서도 공공서비스, 사회복지의 유지는 매우(혹은 더욱) 중요함. 이들이 붕괴될 경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및 국민경제도 파탄, 인구문제조차 더욱 악화될 것임. 따라서 변화하는 조건에서 공공서비스, 사회복지를 어떻게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공공부문 노동운동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속가능성은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과도 직결될 문제

- IMF 금융위기 등 과거 사례, 중남미 등 외국 사례를 볼 때 국민경제의 악화와 공공부문의 부실화는,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이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강행하는 명분이기도 했음.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모두 막아내면 좋겠지만 과정에서 많은 희생도 발생하며, 일부 사업장이나 기관에서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경제, 산업구조 자체가 크게 훼손되기도 했음. 따라서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에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고령화에 따라 새롭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인 것이 노인 돌봄 영역임.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

비스 확대(예: 사회서비스원)은 물론 커뮤니티 케어 등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기반의 돌봄 기반 구축 등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화와 같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족의 환자/노인 돌봄 부담을 경감해야함. 이들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종사하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성 등에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을 것임

- 한편 아동 청소년 관련 영역(어린이집, 초중등 학교 등)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오히려 공공서비스와 노동조건을 개선해가는 것을 통해 가족과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이 더 용이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운동을 전개할 수있을 것임. 이러한 각 영역의 사회적 지출이 서로 경쟁하거나 상충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겠음

- 따라서 인구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기 전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공공서비스 약화와 노동자 피해를 부르지 않으면서도 공공 지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효율화하는 방법을 찾고,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현실성을 고려하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에 따라 조세, 사회보험료 인상이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최근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인상 자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최근 공공요금 관련 투쟁).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유지를 위해 일정한 요금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전제로) 중상위 소득 노동자의 조세부담 증가도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노동자 내부의 합의를 전제로 사회적 합의도 필요

- 향후 예상되는 객관적인 경제적, 인구학적 조건 변화 대응은 정부나 자본가 계급이 알아서할 일이지 노동자계급은 최대치의 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투쟁에 집중하면 족한가라는 쟁점이 있음. 노동자 계급이 사회를 운영하려는 변혁주체이기 때문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객관적 변화에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에 투입할 인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해지면 더 강력한 긴축의 백래쉬가 진행될 수 있음.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사회의 유지가 가능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서 자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경제구조를 변혁해가는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 인구감소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의 '대안'이 되어야.

4) 공공부문 이외에 고민할 문제 : 성별 임금평등과 이주노동자

o 성별 임금평등 문제

- 외국 사례를 보면 여성도 출산이나 양육에 방해받지 않고 노동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나라들은 출산율 '방어'에 성공. 스웨덴은 1970년대 이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조건으로 양육과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직업 경력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미국의 경우 직무급 중심의 유연한 고용구조라는 특징이 역설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이어졌다고 평가(조귀동, 2023). 남녀 모두 가족구성과 임신 출산 육아에도 불구하고 생애 소득을 포함한 인생의 '행복 추구'에 있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사회적 약속과 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 한국의 경우 M 자형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에서 보이는 것처럼, 출산육아 시 경력단절 문제 심각(이 때문에 정규직 남성도 육아휴직 회피, 연공에 기반한 승진/임금상승과 40대 후반에 명예퇴직이 많은 상황에서 30대 초중반 경력단절은 큰 손실이 되기 때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촉진은 물론이지만, 여/남 모두의 출산육아가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 인사제도, 임금체계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이러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임)

o 이주노동자 문제

- 여러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인구감소 추세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공공부문의 쟁점을 넘어서는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로 더 고민이 필요한 쟁점이 많음

- 대표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 미국이나 캐나다가 인구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상황이 용이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기 때문임(캐나다는 오히려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 한국 현실 상 급격한 이주 문호 개방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더 많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임

- 현재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3D 직종에 고용한다는 발상이 아니라 숙련 일자리에도 고용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야 한국경제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음. (취업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에도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런 점에서 가장 한심한 대안은 최근 발의된 "월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실현될 수도 전혀 없지만 접근 방식도 올바르지도 않음. 기존 내국인들도 자녀를 낳고 스스로 키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보장하고, 이주노동자도 평등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보장해야함.